美 중간선거에 달린 수혜주… 친환경 에너지 vs 방산·원전

개미들 선거 후 증시 향방에 촉각
과거 사례에 상승장 재현 기대감
민주당, IRA 세액공제 복원 추진
공화당, 국방·에너지 안보 기조 지속
반도체·조선은 결과 무관 긍정적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미국 의회 권력 재편을 앞두고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증시 업종별 수혜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에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향후 미국 경기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각)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선 하원 435석 전부와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새로 뽑는다. 미 선거분석업체 디시전데스크HQ 분석을 보면 민주당이 하원(총 435석)과 상원(총 100석)에서 다수당이 될 확률이 각각 84%와 64%에 달한다.

증권가는 결과에 따라 수혜 업종이 갈린다고 본다.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전력기기·헬스케어·신재생에너지, 분점 의회면 에너지저장장치(ESS),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면 방산·원전이 꼽힌다. 3일 코스피는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수익성 우려에 3.59% 하락한 5648.79에 마감했다.

◆선거 후 증시 랠리 가능할까

증권가에 따르면 19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10~12월) 중 84%가 상승했다. 이듬해 상반기(1~6월)에는 88%의 확률로 상승했다. 달러 기준 평균 수익률은 19.8%였다. 이 9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집권 정당이나 선거 이전의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았다. 2022년에는 이 '기적'이 미국과 한국 증시의 하락세를 끝냈고, 이후 MSCI 한국 지수는 25% 급등했다.

대신증권은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거나 양당이 의회를 나눠 갖는 경우 코스피가 올해 4분기 기존 목표치인 6700에 닿을 수 있다고 봤다. 반면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하면 재정지출 확대로 금리와 달러 가치가 동반 상승할 것으로 봤다. 4분기 코스피 하단도 기존 5200에서 4950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5~30bp(1bp=0.01%포인트)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1360~14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장의 관심이 큰 반도체주는 어땠을까.

미 증시에서 1994년 이후 10월 말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반도체주 상승률 중간값은 약 22%였다. 다만 2002년과 2018년에는 본격적인 반등에 앞서 반도체주가 약 11% 하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다. 미국 반도체주가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간선거는 기존 성장모델을 둘러싼 정책 제약과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며 "달라진 환경에서도 AI 기업이 설비투자(CAPEX)를 지속하고 이를 실제 이익과 현금흐름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루웨이브' vs '레드웨이브'

투자자들의 관심은 업종별 득실로 향한다.

대신증권은 금리 하락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인터넷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잔여 혜택 보호를 통한 2차전지의 수혜를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후퇴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업종의 정책 수혜 기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기기 등이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 거론된다.

정원석 iM증권 연구원은 "블루웨이브가 현실화하면 태양광, ESS, 전기차 등 친환경 에너지와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정책 지원 기대가 높아질 전망"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축소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복원과 송전망, ESS 투자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더라도 현행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는 전제에서는 2차전지 업종에 미치는 추가적인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유지하는 '레드웨이브' 시나리오에서는 방산과 원전 등이 주요 관심 업종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에너지 안보 중심 정책이 이어질 수 있어서다. 미래에셋증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과 국방물자생산법 등을 활용한 핵심 산업 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방예산이 늘어나게 된다면 미국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의 기회가 확대될 수도 있다. 원전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반도체·조선·보험 등은 어떤 결과에도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 업종 모두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부담이 없다"며 "반도체는 블루웨이브·분점의 미국 금리 하락·원화 강세, 조선은 마스가(MASGA)·함정 MRO의 초당적 지지, 바이오는 바이오시큐어법(BIOSECURE법)이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서학개미들도 수혜 업종 찾기가 한창이다. 정정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10월 미국 빅테크 주가 조정이 컸으나 장기 상승 추세를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최근 주가 조정으로 낮아진 밸류에이션 멀티플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에서 주목해야 할 섹터로 정보기술과 경기 소비재를 제시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원·하청 교섭 확대됐지만… 의제·책임범위 놓고 노사 혼선

노란봉투법 7개월

❷ 현장의 변화와 과제

현대제철, 자회사 노조와 안전교섭 합의
이행 시점·주체는 후속 협의서 논의
교섭 의제 확대에도 노사 입장차 여전
노동계, 교섭 지연·정부 지침에 반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으로 원청과의 교섭 가능성이 넓어졌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따능 AI로 생성한 노란봉투법 관련 이미지. /따능 AI

지난 3월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으로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길이 넓어졌지만, 교섭 의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현장의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합의를 도출한 사업장이 있는 한편, 기존 안전관리 업무가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놓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제철과 자회사 4개(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노조는 산업안전 분야의 원·하청 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합의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시점과 주체는 후속 논의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현재 자회사와 자회사 노조 간 기존 단체교섭에 대한 후속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하청 교섭 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는 자회사 단체교섭 후속 협의 종료 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원청과 자회사 노조가 합의에 이른 사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섭 범위 확대가 구체적인 근로조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교섭 의제를 제시하는 단계부터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두고 노사가 이견을 보이는 경우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용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공인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교섭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은 노사가 다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지원하거나 자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교섭 의제 등이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그게 결과물로 나온 것은 아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 노무사에 따르면 노조는 교섭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은 사안도 의제로 제시하려는 반면, 사용자 측은 해당 사안까지 교섭해야 하는지 판단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노동조합들은 한 번씩 실질적인 교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가 교섭에 다 응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변재인 미래생각일자리센터장(공인노무사)도 교섭 상대방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변 노무사는 "현장에서는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부터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견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가 축적돼야 교섭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도 정립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혼선은 원청이 기존에 수행해온 하청 노동자 안전관리 업무와 관련한 상담에서도 나타났다.

이용석 노무사는 "원청의 안전관리자가 보통 하청까지 관리를 해줬다. 같은 건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일도 같이 하기 때문"이라며 원청의 안전·보건관리자들이 기존 관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향후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에 관여해온 사실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는 우려다.

반면 노동계는 작업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원청이 관련 교섭에도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전호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 들어가 일하는 구조에서는 하청이 안전체계나 장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현장을 전체 관할하고 있는 원청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안전 문제를 원청과의 교섭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청 안전관리도 교섭 쟁점 부상
일부 사용자, 교섭 책임 확대 우려
노동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조
근로조건 개선 성과는 더 지켜봐야

같은 안전관리 업무를 두고 사용자 측에서는 교섭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려는 반면, 노동계는 원청이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교섭 범위를 안내하는 정부 해석지침의 역할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월13일 청와대 앞에서 원·하청 교섭에 적용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을 지연시키고, 정부 해석지침이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를 좁히고 있다며 시행령·해석지침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정부 지침이 교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눠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사가 각자에게 유리한 대목을 근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수 기자 gws0325@

〉〉 1면 '국산 전기차… '서 계속

中 전기차 국내 점유율 44%
국산차 비중 49%로 하락

앞서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외 시장 확대를 언급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역시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 자동차는 제외됐다"며 국산 전기차의 주류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침투 속도와 맞물려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전년 동기(5만 1535대) 대비 2.2배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43.5%로 8.4%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48.7%로 6.2%포인트 하락하며 과반이 무너졌다. 가격 경쟁력과 배터리·소프트웨어 기술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국내 시장 점령이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제조업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지만, 지원 대상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핵심소재, 태양광·풍력,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로 전기차는 제외됐다. 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미래형 자동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4건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는 11월 조세소위원회에서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성운 기자 ysw@